

17. 國土2020의 展望과 課題(Ⅱ)

〈國土開發研究院 廳舍竣工記念 심포지움〉

資料提供：國土開發研究院

이 내용은 국토개발연구원(원장 李建榮)이 지난 5월 12일 청사준공기념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주제：국토 2020의 전망과 과제)내용입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5차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21세기 대약동을 향한 국토개발과제

朴 良 浩(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 21세기를 향한 발전의 에너지

21세기는 한민족에 있어서는 대약동을 위한 도전과 희망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 국토의 미래상을 조감하여 본다면, 안으로는 통일이 되어 국력이 신장하고 지역마다 특성을 갖춰 제마다 독특한 경쟁력을 갖춰 골고루 잘사는 선진 문명 국토가 되는 모습이고, 밖으로는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심국의 일원으로 대약동하는 모습일 것이다.

21세기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자면

적어도 한세대 후인 2020년 정도를 내다보고서 미래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토에 부하되는 도전과 기회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다음 도전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며 기회를 새로이 창조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21세기를 향한 발전의 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융솟음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2. 오늘날의 국토문제

국토개발이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인적, 자연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제반 국토자원을 지역간에 합리적으로 입지시키고 이를 유효하게 이용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위를 의미한다. 지난 한 세대동안 국토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다. 그 결과 국토의 기간시설이 확충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 보전하기 위한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등 국토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도 상존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문제와 지방의 침체문제가 병존하여 국가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문제는 사회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집중이 과거에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국가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전국 인구증가량중에서 수도권에서 늘어나는 인구의 율이 '60년대는 57%, '70년대는 74%, '80년대에는 88% 특히 '85~'90년에는 91%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동경수도권의 60%내외, 파리수도권의 30%내외에 비하면 크게 높은 비율로서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수도권이 과밀문제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동안에 지방에서는 성장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빈곤하여 지방도시와 농어촌은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2년전 '90년대의 사회간접자본을 논의하기 위해 OECD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현상이 선진제국의 공통 현상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 겪는 문제는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일시적인 부족 문제 또는 국제간의 교통시설 연결문제 등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만성적이고 누적적인 부족문제 때문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인적, 물적 교통수요가 크게 증대

하였으나, 교통시설의 공급부족 현상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오늘날 매년 5~6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토지자원, 수자원 등 국토자원에 대한 수요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의 부족으로 산업생산 및 국민생활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면적 중 도시적 용지의 구성비율이 선진국이나 대만등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서 일본이 7%, 미국이 10%, 영국은 9~10%, 대만이 6%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4.5%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심각한 물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 시흥, 수원, 안양 등 수도권지역과 울산, 광주, 전주, 목포 등의 지방에서도 물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더우기 깨끗한 물이 희소자원이 되는 환경오염 현상이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도전과 기회의 공존

가. 국토에 부여되는 새로운 도전

현세대가 안고 있는 이러한 국토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진문명국으로 자리잡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는 국토문제의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짊어지고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적 추세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21세기로 향하는 우리나라는 오늘날 국제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그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체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본격적 가동 등 국경없는 무한경제전쟁시대의 전개로 국제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화의 물결을 제대로 흡수하여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문제, 경부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국토구조를 유지한 채로 국제화의 물결을 맞이하면 국토불균형을 가중시켜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 쌀개방이 될 경우 제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서 경부축에서 벗어나 있는 호남, 충청지역의 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촌으로부터 유출되는 인구는 주로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수도권 집중문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개방화에 따라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산업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 제조업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기존 경부축에 경제활동이 재집중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른 국토불균형의 심화현상은 건설단가가 가장 비싼 수도권지역에 투자소요를 유발하고 수도권에서의 토지가격의 상승, 공공투자비용 및 기업비용의 증가, 교통난의 가중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 주택난, 환경오염의 심화를 유발하고 지방의 침체를 가속화시켜 국가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것임에 틀림없다. 더우기 통일이 될 경우에 북한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급격한 인구유입...통일후 10년간 적어도 200만명이 북한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으로 수도권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누증은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심대히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스런 미래는 현 세대가 허용할 수 없고 우리의 후세가 허용하지 않을 미래이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규모의 확대로 앞으로 국토개발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인구는 향후 10년 동안에 약 360만명이 증가하고 2020년경에는 5,060만명 수준에서 정지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 2만명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향후 10년 동안에 600만명이 증가하여 도시화율이 현재의 80% 수준에서 2001년에는 86%, 2010년경에는 90%수준으로 증가할 것임에 따라 도시개발의 양적이고 질적인 수요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 1가구 1승용차 추세, 물동량의 증가추세는 교통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여객수송수요는 1.4배, 화물수송수요는 2배이상, 자동차수는 1,000만대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어 교통시설 투자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용지수요도 대폭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향후 10년간 주거용지는 400km², 공업용지는 120km², 공공용지는 780km²가 새로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시적 용지의 신규수요만도 약 1,300km²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30년간을 전망해 보면 주택이 1,000만호 이상, 토지가 5,000km² 이상, 수자원도 160억톤 이상 개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어디에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토의 대약동을 위한 국토개조를 해나가는데 있어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리고 가속화되는 경제사회적 변화, 급증하는 차량과 인적, 물적 교통수요, 생활환경 및 문화적인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할 경우에 국민생활 및 생산환경의 악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스런 미래는 현세대가 허용할 수 없고 우리의 후세가 허용하지 않을 미래이다.

나. 새로운 기회

그러나 미래의 변화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하기도 한다.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분권화 추세와 고속교통 및 첨단통신망의 확산으로 지방에 발전 기회가 풍부하여질 것이다. 지방의 기업입지여건이 호전되고 지역간 개발경쟁의 상승분위기에 따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고 활용하려는 추세가 지역마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가용한 토지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저렴하여 지방에 문화시설과 산업시설의 입지빈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대도시의 광역화 및 탈공업화추세에 따라 공업발전기회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도 증가할 것이고 풍부한 산지자원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과거의 낙후지역이 전면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개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지방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즉, 지방에 대한 투자비율을 현재보다 5% 포인트 증가시키는 반면, 수도권의 투자비율을 5% 포인트 감소시킬 경우, 중장기적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평균 0.09~0.29%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소득격차는 연평균 0.26~1.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 분담비율은 매년 0.34~0.52% 감소하여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정책이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권의 가시화, 남북통일여건의 성숙화에 따라 지경학적(Geo-economical) 잇점을 활용하고 남북한간의 호혜적 국토개발기회가 늘어날 것임에 따라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의 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점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안역에 위치하며 항만을 보한 지역의 발전가능성이 아주 높게 될 것이며 남북한 국토가 보유한 특성과 잠재력에 따라 국토를 총화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조화로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21세기 대약동을 향한 국토개발의 철학과 구도

가. 「선택의 폭이 넓은 국토」의 철학

21세기를 향한 국토개발정책의 초점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富國) 국민모두가 국토 어디에서 살아가더라도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安民)여건, 즉 부국안민(富國安民)의 국토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국토개발과정에서 세가지의 이념이 지속적으로 간직되어야 한다.

첫째는 지역별 잠재력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들이 생산적이고도 질높은 환경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토구조를 개조해 나가야 한다. 인구와 경제의 흐름을 지방으로 유도해야 하며, 선진한국을 향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지방에서 창출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수도권외의 비대화를 지방이 견제하고, 지방의 침체를 수도권이 견제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되게 발전되도록 하는 견제와 균형의 이념이 국토개발과정에서 자리잡아야 한다.

둘째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토개발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대적 확충으로 국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며,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 등 국토의 3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국토생산성의 극대화 이념이 자리잡아야 한다.

셋째는 국제화 시대, 통일시대에 대비한 거시적 국토개발구도속에서 21세기의 선진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토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개방되고 국제사회와 직결되며 변화의 물결이 국토 곳곳에 스며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토를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일이 시대적 소명이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남북한간의 균형된 발전, 한반도 전체의 일일생활권구축 차원에서, 그리고 동북아 경제권을 주도할 수 있는 진취적 구도속에서 국토개발방향이 설정되고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국토 통합의 이념이 국토개발과정에서 뿌리내려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는 우리국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국민의 긍지를 유도하기 위해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표현을 즐겨 쓴 바 있다. 이제 앞서말한 부국안민(富國安民)의 국토속에 담긴 세가지의 이념-지방과 수도권간의 견제와 균형의 이념, 국토생산성의 극대화 이념, 국토통합의 이념-이 결합된 국토의 새로운 철학을 어떠한 표현으로 단순화 할 것인가? 그것을 여기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은 국토」라고 표현해 보고자 한다. 이는 21세기 한국인이 지니는 만족감의 극대화, 그래서 신명나는 사회적 기반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러

한 국토를 계획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계획가의 관점에서 보면, 후기산업사회에서 주요하게 부각되는 현상중에서 개인의 선호가 다양화 되는 현상을 계획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허용적 계획(premissive planning)」이 앞으로의 국토개발계획의 중심적인 특성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수도권 일변도의 선택행위가 21세기에는 다양한 공간에 대한 선택행위로 바뀌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선택의 폭이 넓은 국토는 또한 선택의 자유가 신장된 국토이며 그 속에서의 한국인은 비로소 선택의 시대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노예문화로부터 벗어나 선택과 경쟁의 자유로운 사고가 보편화된 자유인의 조건을 구비한 인간이 된다. 다양한 선택의 폭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동시에 갖추어진 국토와 국민의 21세기 대약동을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4가지 전략이 21세기 국토개발의 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전략 1 : 메가로폴리스 개발

선택의 폭이 넓은 국토를 만들어 가자면 실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인구와 경제의 흐름이 지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이 더불어 번영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집중형 국토구조를 지방분산형 국토구조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도시와 농어촌을 합리적으로 육성하여 인구와 산업의 자발적인 지방분산을 유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지방대도시가 수도권의 비대화를 견제할 수 있는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중소도시의 산업기능을 전문화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경제력을 제고하는 일이 요구된다. 농어촌의 경우는 산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전원도시적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수도권의 경우는 과도한 집중의 완화 및 수도권 내부공간구조의 재편을 유도해 나가는 일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들을 능률적이고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신메가로폴리스를 지방에 개발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권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전략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메가로폴리스란 그리스어로 ‘큰’과 ‘도시’라는 말이 결합된 용어이다. 도시와 도시가 교통망을 통하여 능률적으로 연결되고 주변의 농어촌지역도 그 기능과 공간구조가 도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도시생활과 농어촌생활이 구분되지 않는 거대한 도시화 지역의 의

미한다. 예를들면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보스톤 북부로부터 버지니아주의 노포크에 이르기까지 약 1,000km의 대규모 도시화 지역으로서 북동부 해안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대규모의 시가화 지역같은 지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앞으로 몇개의 거대한 메가로폴리스를 형성하고 초장기적으로는 한반도전체가 하나의 큰 메가로폴리스로 통합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고속도로망, 고속철도망 그리고 첨단고도통신망이 국토에 거미줄처럼 펼쳐지고 도시지역은 공간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계속 확대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만을 생각하여 본다면 적어도 4개의 메가로폴리스가 국토구조를 형성하는 큰 도시지역이 될 것이다. 기존의 수도권지역인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이 더욱 확대되어 해안역을 따라서는 경기만, 아산만, 가로림만 지역을 잇는 지역으로 까지, 내륙으로는 강원도의 춘천, 횡성, 원주, 충청도의 서산, 천안까지로 이어지는 광역수도권 메가로폴리스가 형성되어 갈 것이다. 또한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김해-창원-진해-마산-대구-김천-구미-포항-울산지역이 더욱 확대되어 북으로는 안동-영주-울진으로, 남으로는 삼천포-진주로 이어지는 거대한 동남부권의 메가로폴리스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광역도시권 메가로폴리스, 동남부권 메가로폴리스는 대부분 이미 형성되어 있거나 조만간 고속교통망의 건설로 완성되어 나갈 것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근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개발되어 국가발전의 경제적 원동력을 이룬 바 있으며 지금은 어느정도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이제 21세기를 대비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수도권에 대응해 나갈 새로운 메가로폴리스가 있다. 이는 군산-이리-전주-무주-영동-옥천-청주-조치원-공주-부여-대천-장항을 잇는 금강유역권의 메가로폴리스와 목포-광주-순천-광양-여천-여수를 잇는 서남해안권의 메가로폴리스이다. 이들 신메가로폴리스는 지금까지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지만 그 경제적인 잠재력으로 볼 때 향후 중국과의 개방적인 교류, 그리고 해양경제권의 융성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받아들이고 국토의 균형된 개발을 위한 중추지역으로 틀림없이 부상될 수 있다. 이들 지역을 잘만 개발한다면 부국안민(富國安民)을 위한 국가의 대들보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지역개발의 순서를 기존의 관행에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적 측면에서 개발의 유효수요가 이미 몰려있는 수도권으로부터 남쪽으로 차츰차츰 내려서 개발한다는 안이한 발상으로부터 탈피하여 서남해안권의 목포로부터 북쪽으로 올라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일은 21세기를 향한 경국책

(經國策)으로서 추진해 볼 가치가 충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남해안권의 메가로폴리스와 금강유역권 메가로폴리스에 새로운 산업벨트를 개발하면 개발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조업이 지금처럼 경인공업지대와 동남부 공업지대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황해경제권 발전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항만여건이 좋은 서해안지역과 인근내륙을 연결하여 신산업지대를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해안역에는 입해입지형 공업을, 내륙도시에는 첨단산업을 개발하는 산업지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아산만-대전 신산업지대, 군장-이리-전주 신산업지대, 목포-광주-광양만 신산업지대의 개발가능성이 높다. 이들 산업지대를 연결하여 국토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L자형 산업벨트에 머물지 않고 이를 동남해안공업벨트와 연결하여 서해안과 남해안 통합산업벨트를 완성하는 전략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책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해소를 겨냥하고 경제력의 강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동남권 메가로폴리스의 남해안 서쪽편과 서남해안권 메가로폴리스의 동쪽편을 묶어서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확정하여 개발하는 전략을 추구해 봄직하다. 이른바, 여수-순천-광양-사천-진주를 포함하는 국토남부 해안지역의 중심부지역을 「환광양만 행정특구」로 만들어 이 지역이 갖는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일도 추진해 볼만하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과 생산현장의 접목이 요구된다. 신산업지대별 특성에 맞추어 이공계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을 배치·육성하며 연구시설의 유치, 정보센터 건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자면 고급두뇌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교육받고 서울에서 일하는 반면에, 공장과 미래산업들은 모두 지방에 입지하여 있는 분절된 산업입지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은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두뇌는 수도권에, 공장은 지방에 입지하는 단절된 산업공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별로 특성있고 몇몇학과는 어느대학도 따라올 수 없는 특화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학간의 비교우위를 보유하는 특성학과를 중점 육성하며 고급두뇌가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환경, 문화환경, 연구·개발환경 등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개의 대학을 새로이 입지시켜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신도시개발전략으로서 대학신도시개발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산업지대내에서 최종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초소재산업 및 중간자재산업 등을 상호인접한 곳에 배치하고 계열화하여 불필요한 수송수요발생을 억제하고 제품의 생산성, 공급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일이 바로 국가경쟁력, 지역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일이다. 이와같이 신산업지대를 고도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정책요소는 바로 「일하는 문화」와 「놀이하는 문화」를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지대 인근지역에 여가·휴식·문화·관광공간을 적극 조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지방에 메가로폴리스 개발전략의 또 하나의 핵심은 중소도시의 개발전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의 그 수가 적절하고 국토공간상에 분산되어 분포되어 있는 그 입지적 특성으로 볼 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공간인 동시에 대도시의 과밀 문제, 농어촌의 공동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방의 메가로폴리스내의 중소도시를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인 「마이클 포터」는 「국가의 경쟁우위」(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라는 책에서 일정국가에서 일정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탁월한 요인 가운데 한가지는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군집현상(Industry clustering)이 지역별로 특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지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잡기 위하여 「포터」의 모델을 적용하여 지방의 메가로폴리스내의 중소도시 개발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도시별로 모든 제품을 백화점식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별로 성장의 기반역할을 할 수 있는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이 산업에 자본, 기술, 인력, 정보를 집중시켜 육성해 나가면 머지않아 중소도시의 경제력과 경쟁력이 탁월하게 높아질 것이고 그 결과 국가경쟁력도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중소도시별로 주력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는 관련산업 및 지원산업을 군집형태로 입지시켜 나가는 주력산업군집전략을 추진토록 함이 바람직스럽다. 이때 산업군집의 거점역할을 하게 되는 대기업의 입지는 필수적이다. 대기업의 입지는 여러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창업주의 연고지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경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최근 제시된 바 있는 전략인 초일류기업에 의한 다지역(多地域) 입지전략이 요구된다. 초일류기업이 창업주의 연고지에 집착하는 폐쇄적인 입지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도 입지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입지전략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지방의 메가로폴리스내의 농어촌은 대대적인 변모를 가져와야 한다. UR은 농어촌의 정주·산업구조를 개편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농어업의 영세성, 저부가치적인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과학적 농업 및 기술집약적 농업을 동시에 육성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평야지대에 발달된 우량농경지 지역을 대상으로 기계화를 촉진하여 대규모 과학영농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의 전문화된 품목생산을 확대해야 할 것인데, 농어촌의 인력부족현상을 전망할 때에 과학적 자동시설을 보유한 유리온실 재방방식이 전 농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메가로폴리스내의 도시주변지역 및 연안지역에 농어업제품의 수출 및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잘 개발하면 농어업의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메가로폴리스내에서 농어촌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전원도시(garden city)를 만들어 가면 거주입지의 선택 폭을 더욱 넓혀주게 될 것이다. 농업인력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유흥농지의 경우는 공업, 주거, 여가용도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의 산업구조를 농업위주의 구조에서 다각화된 구조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의 전원도시에 건설되는 주택은 아파트 일변도로 할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저층 및 중층의 주택을 조화롭게 구성하고 녹지속에 편리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와함께 대도시와 중소도시등으로의 교통망을 개선해 나간다면 적어도 2005년 이후부터는 도농통합 개발이 성숙화되어 메가로폴리스내의 도시와 농어촌의 이분화된 개념자체가 소멸되어 수준높은 시가지화 지역속에서 다양한 주거공간과 취업 및 문화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지방의 메가로폴리스를 이와같이 전략적 차원에서 개발을 이룩하는 한편, 수도권 메가로폴리스의 경우는, 이 지역의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km내에 수도권 인구의 80%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수도권내의 인구와 산업재배치 여지는 아직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수도권내에서도 어느정도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초국경의 국제경제구조 변화속에서 우려되는 사항중의 한가지는 국제적 기능이 아직도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국제도시 및 국제도시권으로 발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이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국제공항, 외교단지, 국제전시장, 국제정보센터, 컨벤션센터 등을 건설하여 서울의 국제

도시적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을 동북아의 중추도시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더욱 키워 거대도시로 만들면서 국제도시로 만들어 가려는 발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거대도시는 혼잡비용과 시민생활의 불편함이 계속 증가함을 의미한다. 살기 좋고 편리함이 기본적 요소가 되어야 하는 국제도시가 거대도시적 기능을 겸비하면서 제대로 조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국가적차원에서 볼때 장기적으로는 서울을 국제도시로 전문화하여 국제적인 기능은 보강하되 그의 국내적인 기능은 수도권내와 지방으로 과감히 분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다. 전략 2 : 종합 교통체계 및 첨단정보·통신망의 건설

선택의 폭이 넓은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에 국제간에 사람과 화물 및 정보가 편리하고도 신속하게 이동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속도로망의 확충, 고속철도망의 건설 및 물류기지 조성이 요구되며 트리포트(Triport : 항만, 공항, 텔리포트)의 확충 및 적정배치가 기본 요소이다.

정부가 밝힌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 의하면 전국을 포괄하는 고속, 고급, 대량 교통체계구축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7,000km로 구성되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전국 격자형 및 환상형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여 2020년경을 전후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30분이내에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토록할 것이라는 비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하여지고 생산제품의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져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 갈 것이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교통정체현상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대 교통프로젝트가 필수적이다. 이는 바로 경부, 호남, 영동축 등 대량교통수요축을 대상으로 시속 300km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망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프로젝트이다. 메가로폴리스의 효율적인 개발 및 그 속에서의 신산업지대와 신도시 건설등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고속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고속전철이 본격적으로 운행되면 주요 도시간의 통행시간이 1/3로 줄어들게 되어 고속전철역이 입지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초광역도시권이 형성되고 메가로폴리스와 메가로폴리스가 서로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이는 고속철도건설이 국토균형발전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적극적인 지방육성시책과 수도권과밀집중에 대한 억제시책이 고속철도 개통이전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개통후에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고속전철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보너스」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에서 보면, 고속전철운행의 타이밍과 고속철도건설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병행이 수도권집중형 국토구조를 지방분산형 국토구조로 변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운행이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속전철이 본격적으로 운행되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도권집중추세를 적극 둔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메가로폴리스 육성 및 정비 시책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수도권의 인구집중추세가 대폭 완화될 정도로 강력하고 일관된 지역균형발전시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거두어졌을 때 고속철도가 본격적으로 운행되면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망은 통일후에는 평양, 신의주, 원산 등 북한의 주요도시를 연결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북방대륙 및 유럽공동체와의 교류에 대비한 국제고속철도망과도 연결기능을 보유하게 될 것임으로 한민족의 웅대한 야망에 맞추어 고속철도 사업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새로운 국제환경은 전방위(全方位) 해양축의 필요성을 더 높여 주고 있다. 기존의 부산-동경-미국이라는 동축 단선축의 해양축에서 탈피하여 목포-상해-홍콩-하노이-방콕-싱가폴-자카르타-시드니-인도양으로 연결되는 남축의 신해양축을 개발해야 한다는 최근의 주장은 큰 설득력을 지닌다. 아시아·태평양경제권의 발전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메가로폴리스별로 거점항만을 개발·확충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수도권 메가로폴리스의 경우 인천항, 아산항이, 금강유역권 메가로폴리스의 경우는 군산항, 장항항이, 서남부권 메가로폴리스에는 광양항, 목포항이, 동남부 메가로폴리스에는 부산항, 포항항, 울산항이,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는 동해항, 제주도에는 제주항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항만간의 역할분담에 근거하여 이들 항만의 개발·정비를 추진하는 일은 한국발전의 해양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애로가 예상되는 공항이용수요를 해결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중추공항역할을 할 새로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세계각국과 연결될 신국제공항을 수도권 메가로폴리스의 영종도에 건설하되 지방으로 부터 신공항으로 진입하기 쉽도록 교통망체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국제공항기능을 제한적이거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 일부에도 국제공항건설이 요구된다. 이러한 국제기반의 건설을 통하여 사회전반에 흐르는 국제화 추세를 지원하고 국제화 물결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는 또한 정보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에 부응하여 정보획득기회가 전국적으로 평준화될 수 있도록 첨단인 정보·통신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중차대한 일이다. 전국적으로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가능한 조속히 구축하고 메가로폴리스내의 중심도시에 텔리포트를 건설하여 정보의 거점화를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다.

라. 전략 3 : 21세기의 치산치수와 지속가능한 발전

21세기의 치산치수(治山治水) 전략이 필요하다. 국토의 주요 3대자원인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며 환경보전을 강화하는 일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선택의 폭이 넓은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국토면적의 2/3를 차지하는 산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하면 우리의 국토가 좁은 국토라는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부터 2020년까지 택지, 공장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도시적 용도의 용지는 현재보다 적어도 5,000km²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를 분석해 볼 때 앞으로 산지이용은 불가피할 것이다. 2001년까지만 해도 도시적 용도의 용지가 1,300km² 만큼 새로이 필요한데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지를 400km² 정도는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2020년까지는 적어도 1,400km²(국토면적의 1.4%)의 산지가 도시적 용도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사가 낮은 일부 산지를 주거지, 공장부지, 공공시설용지로 이용하며 경사가 높은 지역은 목장, 생산적인 임업림으로 조성하는 등 산지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전략이 21세기 치산전략의 주요 핵심가운데 한가지가 될 것이다. 전원도시적인 주거단지, 산지-해안접합지역 입지형 오피스단지, 연구학원도시, 실버타운, 첨단

산업단지, 휴식·여가·연수공간, 과학의 숲·예술의 숲·스포츠의 숲 등의 산림도시개발은 산지이용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토지개발기법을 지양하고 자연과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인간존중의 산지이용기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이 산지를 활용하여 가용토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되 이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등 토지공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방지함으로써 경쟁력을 튼튼하게 키워나가는 일도 21세기 대도약을 향한 필수 조건이다.

경제가 커져가고 생활패턴이 다양화해 가면서 물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향후 30년 동안 160억톤의 용수수요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내에서 이미 공급되고 있는 용수공급량의 1.6배 수준이다.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중소유역에도 중규모댐을 건설하여 용수공급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용수공급, 수질보전, 방재를 하천유역별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체제가 요구되는가 하면 댐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통하여 댐건설의 적지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전국민 모두가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광역상수도에 의한 용수공급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물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단일광역상수도 권으로 연결하는 거대프로젝트 또한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해역(海域)은 산지와 더불어 21세기 국토개발에 있어 뉴프론티어가 되고 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은 「바다와 조선민족」을 논하면서 우리국민이 얼마나 바다지향적인가에 국운이 달려 있다고 예언한 바 있으며 바다를 개척함으로써 잃었던 國富, 진취적 기상을 되찾아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반도국가로서 남한만의 경우에도 12,00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3,200개나 되는 대소 도서, 국토의 3.5배에 달하는 대륙붕이 전개되어 있다. 또한 수심 20m이내의 수역만도 21,000km²에 이르고 있다. 정보, 산업, 교역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내륙지향적 국토이용으로부터 탈피하여 신해양축의 개발, 임해공항 및 항만의 건설, 임해산업지대의 개발 등 해양지향적 국토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해양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륙붕 및 해저광물의 개발, 조력발전 등 신에너지원의 개발, 인공섬의 건설, 마리너 및 해중, 해상공원의 개발, 비축기지조성 등의 해양개발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진취적인 국토개발의지를 강화하고 실천하는 일은 국운을 융성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부각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바다 3면의 기적」이 2020년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 치산치수사업을 비롯하여 산업지대 개발사업은 환경우호적 사업이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토개발사업에 있어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이 뒤따르는 녹색계획(그린프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환경의 중요성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고 환경개념은 개발행위속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는 인식이 이미 급속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업단지의 개발을 계획 했을때 그 공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은 환경오염물질을 깨끗히 정화처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녹색 계획속에서는 깔려있는 것이다. 국토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환경내재적 개발(Environment Embodied Development)이 21세기를 내다보는 국토개발의 진정한 기본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인권의 개념이 국제사회에 보편화되고 있다. 인권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여된 개념이 었지만 이제 인권개념이 환경권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해치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질 것이다. 21세기에 대약동하는 한국이 환경문제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마. 전략 4 : 남북통일시대를 겨냥하는 신국토개발축의 형성

우리의 염원인 남북통일 통일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최소화되는 조화로운 통일이 되지 않으면 통일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버릴 것이다. 남북의 국토통일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남북의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통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데, 한반도 및 동북아경제권 차원의 거시적·장기적 국토개발구도를 미리 설정해 보는 것도 그러한 준비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관계개선 정도를 감안하여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되 우선 개발수요가 집중할 휴전선일대의 남북접경지역의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 통일후 남북한 전체 및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의 동북3성 등으로 구성되는 대륙경제권 차원의 국토개발 구도를 미리 설정하여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통일후 떠오를 핵심적인 국토개발과제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남한내의 지역간 균형 개발 관점으로부터 남북한 균형개발 관점으로 정책 초점이 바뀌어져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시설의 현대화가 중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둘째, 국제적 관점의 국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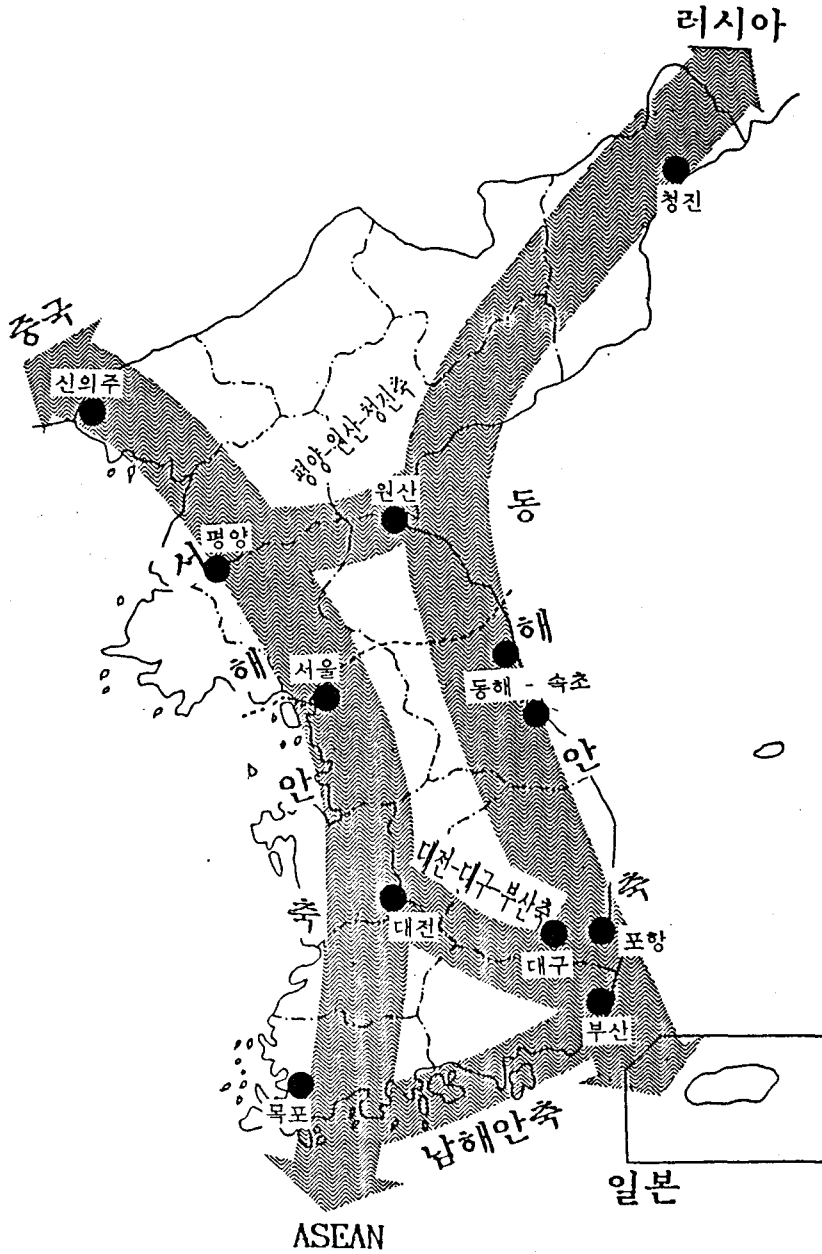
개발정책이 중요해 지면서 동북아경제권속의 한반도 전체의 국가경쟁력강화 측면이 중요해질 것이다. 셋째, 실업급증으로 북한지역의 경제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지역의 종합적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거주이동의 자유에 따라 남한으로의 인구이동이 급증하여 남한 유입인구의 지역간 분산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후 초기 10년동안에 최소한 북한인구 200만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남북연결 사회간접자본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남북연결교통·정보망을 확충하고 또한 다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통일국토를 제대로 개발·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뚜렷한 목표가 요구된다. 남북한간의 균형개발 및 남북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토전체의 효율적 개발로 통일국가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일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통일국토개발의 제일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된 국토속에서 한반도 전체의 개발 잠재력 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안 및 내륙지역 통합형 국토개발축 구도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개의 큰 활모양의 해양 개발축을 설정하고 이를 동북아경제권과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서해안 지역 개발축 및 동해안 지역개발축으로서, 이는 통일국토의 비상을 기약하는 양날개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서해안지역 개발축은 목표-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개발축으로서 환황해경제권을 겨냥한 축이다. 이는 남북으로는 중국 및 ASEAN과 연결되는 대륙축 및 신해양축으로 연장된다. 동해안지역 개발축은 부산-포항-동해-원산-함흥-청진을 연결하는 개발축으로서 환동해경제권을 겨냥한 축이다. 이는 북으로는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 남으로는 일본과 연계되는 축이다.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남쪽으로 연결하는 남해안축도 해양축으로서 형성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 연결축이 또한 2개축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후 수도권의 비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주요 도시간 행정·경제 중추관리기능의 분담을 전제로 하여 남한측에서는 대전을 분기점으로 하여 대전-대구-부산과 연결하는 축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측에서는 평양을 분기점으로 하여 평양-원산-청진과 연결하는 축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축상에 메가로폴리스 차원의 광역거대경제권의 개발구도가 설정될 수 있다. 연안국토개발축, 내륙연결 국토개발축상에 입지한 도시군집과 주변 농어촌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적인 메가로폴리스를 설정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개발하고 개발효과를 축상으로 또한 인근지역으로 확산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서해안축상에

21세기에 대비한 신국토개발축



는 광주-목포-광양의 서남해안권 메가로폴리스, 군산-전주-대전-청주 등의 금강유역권 메가로폴리스, 경인지역-개성지역을 잇는 광역수도권의 메가로폴리스(이 지역에 통일수도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동북3성 경제권과 직결되며 남쪽의 금강유역권 메가로폴리스와 대칭되는 평양-남포-해주 메가로폴리스, 신의주-중국과의 접경지역 거점경제권, 제주 거점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축상에는 부산-마산-대구-포항의 동남지역 메가로폴리스, 동해-강릉-설악-금강-원산-함흥을 잇는 띠모양의 동해안 메가로폴리스, 청진-나진-선봉(두만강하구) 거점경제권이 블라디보스톡 경제권과 직결되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메가로폴리스 또는 거점경제권내에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유기적 연계개발이 요구된다. 한반도전체 시각에서 대도시간에는 경제·사범·행정·교역의 중추관리기능을 분담하며 메가로폴리스와 거점경제권내의 도시와 농어촌간의 통합적 개발이 중요해질 것이다. 국토개발축 및 메가로폴리스와 거점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들을 관통하는 고속간선교통망과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건설하여 한반도 전체를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면 메가로폴리스와 메가로폴리스가 융합되어 한반도전체가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메가로폴리스가 되어 2020년경에는 대약동하는 통일 국토적 기반이 조성될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 러시아대륙과 연계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추진하면 러시아, 중국의 대륙경제권과 협력·교류증진의 기반이 강화되고 한반도전체의 국가경쟁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4. 금지·희망·새로운 의지와 노력

일찌기 우리나라의 국토를 사랑하는 한 계몽가 김교신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우리 국토가 갖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널리 알린 바 있다.

조선의 지리적 요소에 관한 한 우리가 불평을 토하기보다 만족과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넉넉히 한 살림살이를 부지할 만한 강산이요, 넉넉히 인류사상에 큰 공헌을 제공할 만한 활동무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겁이 많은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기있는 자에게 불안한 땅이 없다. 무릇 생선을 낚으려면 물에 갈 것이며, 무릇 벌을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가야 하는 것이다. 조선역사에

편안한 날이 없다고 함은 무엇보다도 이 반도가 동양 정국의 중심인 것을 여실히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물러나 은둔하기는 불안한 곳이나 나아가 활약하기는 이만한 데가 없다…… 조선반도에 지리적 결합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다만 문제는 이 반도에 사는 백성의 소질, 담력여하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동양의 온갖 고난도 이 땅에 집중되었거니와, 동양에서 산출해야 할 바 모든 고귀한 사상, 동반구의 반만년의 총량을 대용광로에 달하여 낸 엑기스(精素)는 필연코 이 반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리라.

21세기 국토의 대약동을 기약하자면 이같이 60년전에 제시된 국토에 대한 공지를 되살려 국토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에 바탕을 두고 선택의 폭이 넓은 부국안민(富國安民)의 국토를 이룩하자면 용기와 낙관 또한 요구된다. 낙관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전략적 국토개발 방향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는 진취적 기상이 필요하다. 이제 북만주와 러시아의 연해주를 뛰어넘는 천리안(千里眼) 이상의 시야를 갖는 국토계획이 요구된다. 남한만의 지도를 펴놓고 하는 국토계획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지금부터는 세계지도를 펴놓고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토정책이 정부정책의 핵심으로 이제부터 자리잡아야 한다. 국토개발에 통치권 차원의 의지와 힘을 모으고 국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으로 21세기 국토개발의 대장정을 열어가 보자.

가격경쟁 부실공사 기술경쟁 성실공사